

제354회 국회  
(정기회)

#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1월6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1. 2018년도 예산안 .....	2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2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2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주요 활동과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산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가시적

결과물 도출이라는 관점 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수년간의 우리 외교 및 통일정책의 방향 정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주 마무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의 분절화 문제, 재외국민보호시스템 확충, 재외공관 근무 행정직원의 처우 개선 문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 문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

여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말씀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됩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들 안건을 일괄해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심재권 다음은 상정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의 경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아 상정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사전 의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동의안들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 상정해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4.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외교 추진 방향과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보고와 함께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는 국군부대의 레바논 및 남수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18년도 주요 외교 활동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 관련 현 정책 추진 여건을 보자면 올해 들어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위협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을 전개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핵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상황을 기반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로의 국면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다보스포럼과 뮌헨안보회의와 같은 다양한 다자포럼 등의 계기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지원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미국·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주요 다자 무대 계기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4국과의 외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일·러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한미 관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및 고위급 간 소통 조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및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방한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방한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함은 물론 동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하여 국방 역량 및 한미연합 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사일지침상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군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추진하며 미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지속 확대를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향후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 상황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저변 확대 등 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인사 및 전문가 초청 사업과 한미 싱크탱크 공동 세미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발전시켜 새로운 25주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상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 그간 착실히 이루어진 고위급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엄중성 및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양국 간의 경제 및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간 주요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안되었던 9개의 다리(9-Bridges)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파트너국으로 참가할 예정인 2018년 러시아 최대 산업기술박람회인 이노프롬을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및 러시아 월드컵을 적극 활용하여 양국 간 공공외교 및 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외교입니다.

시간이 지연돼 있는 만큼 지역외교 등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현황을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입니다.

신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지역 비전입니다. 내주 개최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 이러한 지역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 아세안 협력 TF 구성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한·아세안 Dialogue 및 한·인도 외교·국방 2+2 차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는 물류·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 유럽, 중남미 및 아중동 지역과의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U와 내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평창 올림픽 계기 유럽 고위인사들의 방한, ASEM 정상회의 계기 고위급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유럽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소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신산업 진출 분야 발굴 및 FTA 네트워크 확충 등 경제협력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평화와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하는 한편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신 한·아프리카재단법이 지난주 발효된 만큼 동재단이 차질 없이 설립,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함

으로써 취약한 대아프리카 외교 인프라 강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기여를 다변화하는 한편 금년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국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 분야의 논의를 지속 선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2024년, 2025년 안보리 진출 기반도 착실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테러리즘, 사이버 안보 등 신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율적·전략적 집행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확대, 국제기구 인사센터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국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계적·통합적·효율적 무상원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원조가 바람직한 ODA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인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경제 외교입니다.

미·중·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우호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 대응을 비롯하여 한중 경제협력 관계의 조속한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 및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등 우리 기업의 북극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파리협정의 국내 이행 등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그리고 유엔의 녹색기후기금 GCF를 통해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 국민 외교 및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외교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내년 초 개소를 목표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코자 합니다.

국민외교센터는 국민 외교 이행기구로서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 국회·학계·NGO 등과의 협업 강화, 국민들의 정책참여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18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지식·정책 등 다양한 우리의 자산을 활용하여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활용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서 세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림픽 계기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에 설치하고, 재외공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을 강화하여 해외 방문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증면제,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워킹홀리데이 등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여권 유효기간 사전 고지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74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는 고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상생 협력의 동반자로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글 교육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국내 기업과 해외 한상 기업 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 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외교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2.0% 증액된 2조 26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118억 원, 기본경비는 22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ODA 등 주요사업비는 2017년 1조 6810억 원 대비 2.6% 증액된 1조 724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기금은 올해 1085억 원보다 408억 원이 증가한 1493억 원, 국제질병 퇴치기금은 21억 원이 증가한 8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배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외교부 예산은 여전히 전체 정부 예산안 295조의 0.77%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레바논과 중동 지역의 안정화와 남수단 공화국의 평화 정착 및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월 1

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각각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모범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유엔, 레바논 및 남수단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파견 연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이 연장될 경우 국제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의 기여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제고 및 레바논과 남수단과의 양자 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경화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복잡한 시기에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 최소한의 대화 채널조차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시급한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념과 세대의 차이를 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총 2조 49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862억 원, 15.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347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5억 원, 25.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175억 원, 7.1%가 감액된 22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통일 국민협약, 통일센터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사업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축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규모는 1조 702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688억 원, 13.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전년보다 834억 원, 8.7%가 증액된 1조 46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조 원대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당국 및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조명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은 2018년도 민주평통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3쪽 예산안 편성 특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민주평통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우선 투입, 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 제18기 민주평통 활동 강화를 위한 필수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주평통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보다 16.7% 감액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 273억 2600만 원보다 9.1%, 2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의 세출예산안을 세분하여 보고드

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8.3% 증액된 56억 29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0.8% 증액된 14억 1500만 원, 주요 사업비는 9.9% 증액된 22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이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 강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1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총 2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등을 위해 금년보다 14.9% 증액된 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역량 강화 예산은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등을 위해 금년보다 15.1% 증액된 2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사무원 2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지원, 평화통일포럼과 통일시대 시민교실, 지역통일 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등을 위해 금년보다 5% 증액된 14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직원들의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예산 3900만 원, 정보화 사업 예산 7억 2400만 원, 경비 업무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예산 1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주평통의 2018년도 예산안은 자문·건의 및 여론수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민주평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기존 사업 내역 조정 등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민주평통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황인성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관련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개별 부서에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교부 차원에서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편성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은 2009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3개 지역기구에 총 199명의 인턴을 파견하였는데, 이후 국제기구 정규직으로 진출한 인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성과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업 개시 10년 차에 이른 동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중남미 전문인력으로서 국제기구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에 따라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맞추어 동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과 5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은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국민의 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외교센터를 외부 조직으로 두는 데 따른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홈페이지 구축비와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동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과 8쪽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국립외교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외교관후보자 보수의 구체적 산출 내역을 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 45명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추가 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50명분의 보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교육을 받게 될 2017년도 외교관후보자 최종 선발은 당초 계획 인원인 45명보다 2명이 적은 43명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7명의 보수에 해당하는 1억 5200만 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관련입니다.

2017년도 3분기 기준 ODA 예산의 국가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스리랑카는 9.4%, 아프가니스탄은 6.9%, 탄자니아는 21.8%, 아제르바이잔은 0% 등 일부 국가에서 전체 예산 집행을 56.1% 대비 극히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2018년도의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 중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2015년부터 미주 지역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전 세계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을 전 세계로 확대 시행하여 거주국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재외동포의 정치력 신장 활동이 활성화·다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지원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지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사업 부실화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기금 중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공동 주도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설립된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구축해 온 외교 네트워크를 지속 활용, 우리의 외교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센터의 중점 사업 분야가 확정되었을 뿐 2018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와 규모를 확정하고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건의 국군부대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국군부대의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

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파견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견연장 동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레바논의 동명부대의 경우 내년에 파견기간이 11년을 경과하게 되는바 레바논 사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파견의 종료 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수단 한빛부대의 경우 대규모 중장비가 동원되는 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비 보전에 대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으로 1쪽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의 준비 철저입니다.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사업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신규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2017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모델 개발, 대국민 소통 채널인 포럼 구성 및 운영, 공론화 결과 종합 및 협약 내용의 전문적 연구 사업, 2021년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남남갈등을 건설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기획 및 조사,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 민주평통 및 다양한 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 사업의 직접 수행 검토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인권실태 조사·연구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실질적 조사 대상은 탈북·귀환한 국군포로, 납북자와 이산가족 중 제삼국 유경험자 등 총 120명입니다.

조사 대상의 인원수 등을 고려 시 이분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기록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의 지역통일센터 운영 사업의 준비 철저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미래행복통장 사업 수혜자 참여 확대 필요입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 근로소득 중 일정 부분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에는 4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요한 기준은 북한이탈주민의 미래행복통장 가입률 12.8%인데 이는 2015년까지 입국자 중 2016년에 미래행복통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1년에서 5년 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7%로 추정됩니다.

이를 고려 시 미래행복통장 예산안 편성 기준인 12.8%는 고용보험 가입률 29.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의 전문상담사 정부 공통 처우 개선 인건비 반영 필요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학교통일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입니다.

학교통일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체험·참여형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학교통일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가 프로그램 수료 후 상당히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8년 예산이 2017년 대비 50%인 3억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는 체험교육 대상 학교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쪽 남북 사회문화 교류 사업의 실적 제고입니다.

남북 간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4년 31.9%를 제외하고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7년은 9월 말 현재 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기타 협력사업은 2009년 이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남북 간 사업 추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특성상 사업 규모와 분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워 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충실히 집행하여 체계적인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잦은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축적된 각종 교류협력 자료, 연구자료 및 발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료 60여만 점이 시간 경과에 따라 훼손·유실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련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항구적인 기록과 보존·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으로 해외 지역회의 초청 국내 회의 참석률 제고입니다.

최근 해외 지역회의 국내 초청 개최 사업의 자문위원 참석률은 55%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서는 항공

임 지원율의 상향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조기에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할 필요가 있고, 참석률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차기 위원 선임 시 출석률을 고려할 필요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18기 해외 자문위원이 17기 자문위원 대비 352명이 증가하였지만 증가 인원 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사업의 내실화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유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2018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협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김정협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까지는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시원치 않은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우리 위원님들은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산안인데 아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예산안도 내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문제, 정부의 35개 부처 기관에 아주 산재되어 있고 분절화가 되어 있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중복되어 집행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처의 것은 이것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조정·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말

씀을 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처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외교부 관할 사업분담금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관할 사업분담금을 죽 보면 분담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이유 이런 게 각각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조약이나 협정, 양해각서 같은 것을 통해서 분담금이 납부되고 있는 게 25%고, 정부의 단순한 방침, 공약, 국제회의에서의 그냥 입장 발표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지금 68%나 됩니다.

이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준 없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지적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외교정책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이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부서가 분담금을 관리하고 이게 자의적으로 편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분 전략·계획, 심의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분담금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좀 명확히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아프가니스탄 군경 지원 분담금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한번 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에 아프가니스탄 군경 지원 강화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4500만 불, 약 517억 원을 신규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결정 과정도 보면 공문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 외교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회의에 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표하고 약속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통제도 계속 불가능해집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프간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가 죽 다 철수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기서 지금 철수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잠깐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아프간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아프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고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연 이렇게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나토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해결하는 길이냐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1년에서 16년까지 5년간 지원된 금액을 보면 유령 군인,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의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이름만 올려놓고 지원을 하는 게 4700만 불이 사용됐다. 이게 지금 언론에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프간군의 40%는 유령 병사다. 이게 실제로 탈레반인지 아프간 정부군인지 구분도 잘 안 되면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담금을 납부하고, 내라고 그러니까 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면밀할 검토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과연 정말 지원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부 관련해서요.

이번에 남북관계 기금 사업의 특성을 보면 6개 사업, 남북관계 개선, 재해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하고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예비적 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에 편성을 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야당은 또 ‘시기상조’, ‘불용’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증액사업은 딱 하나 있어요. 경험 기반 사업에 신규 100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17년 대비해서 4개 사업은 감액됐고 구호 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 증액된 1000억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 개보수 예산인데 물론 아마…… 그 예산 중에서 설계감리비로 편성을 한 것인데 이 문제는 실제로 남북관계가 좀 풀려 나가야 실현이 가능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가 풀리고……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장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닌 것이고 내년 정도에 지금 한중관계가 풀려 나가듯이 남북관계도 대화 채널이 복원되고 남북경협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 나갈 때쯤이 되면 사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개성-신의주 간 철도나 도로 개보수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륙으로, 도로·철도를 통해서 진출하는 길을 열고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경험 주도 성장의 아주 원대한 꿈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실제로 뭐 핵 협박에 굴복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북한 핵 문제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서 북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자기금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묶이는 측면도 없습니다. 재정운용상 어떠한 무리를 주는 것도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북 관계의 확실한 개선 의지 표현의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의지의 표현이고 또 실제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퍼주기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대북제재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마저 끊길 경우에 북한의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층의 건강 문제가 대단히 악화되면서 이 경우에 대북제재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적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시작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김경협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예방 조치이고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임산부나 아동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북제재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과 생존자 확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태규 위원** 그래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 심해 수색에 필요한 예산이 해양수산부 추정에 의하면 한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이 현재 정부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회가 긴급구난활동비로 여기에 상당하는 규모를 증액할 경우에 정부는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예산 부분을 국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감사하고 적극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국감 직후에 제가 해수

부장관님하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어서 지금 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규 위원** 타당성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과거 심해 수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탐사선을 보내서 블랙박스를 발굴해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미 다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이나 또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지금 사고가 난 지 언제인데 여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해수부장관도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예결소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소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한중 관계의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안보 주권에 족쇄를 채우고 한미 관계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회담을 중국은 외교부가 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의 2차장이 나가서 했습니다. 왜 양국 간 공식 회담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례 조사는 제가 안 했지만 양국 간의 체제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처음부터 안보실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부·국방부 다 협의에 참가하는 했지만요.

그래서 안보실에서 중국 외교부하고 했지만 외교부도 협의 내내 참가를 했고 저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태규 위원** 어쨌든 안보실에서 주도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장관께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소위 언론에서 3불 정책이라고 표기한 이 부분은 언제 결정된 것

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누누이 밝힌 기존하는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제가 답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3불 정책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 우리 측의 선제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우리한테 요구한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기존하는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이것을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내내 얘기해 왔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협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양측 간에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거고요. 다만 지금의 상황이 서로 좋지 않으니 앞으로 정상화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것이 합의되었고……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밑 대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중국과 대화가 트인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 9월 중순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물밑 대화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추가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미 MD 체계 참여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정한 것이냐, 중국이 먼저 요구한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의 결정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고……

○이태규 위원 아니, 이것은 장관님 결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결정 같은데, 이미 안보실에서 주관했다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를 국민들이 속 시원히 알게끔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를 안보실에서 주도를 했고 외교부가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NSC 차원에서 결정이 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과는 수시로 협의하고, 또 저희가 중국과 하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백악관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맥마스터의 답을, 앞서 그 기자의 질문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중국과 협의를 하면서 주권적 상황에서는 협의 대상도 아니다 함을 분명히 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훼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에 그러면 한중 간 어떤……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평가받겠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우리 안보 정책에서도 주권이 제약받거나 또는 한미 간에 어떤 이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외교부장관께서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그랬고요. 제가 틸러스 장관하고 어제 아침에 대통령 방한 마지막 조율을 하는 통화에서도……

○이태규 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틸러스와 백악관의 입장이 다르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 주권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의 국익 그리고 안보적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으니까 국제사회의 기류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합의 직후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평가하는 성명이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인권전문기구라든가 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존중되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 전임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이 있습니다. 이 10억 엔의 법적 성격을 장관님께서서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받은 일본 정부 돈의 성격이 명확치가 않은 것이 합의한 큰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TF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전임 정부가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10억 엔을 받았습시다. 그러면 저희가 한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10억 엔을 일본 정부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아니면 새 정부가 강력하게 한일 위안부 협상을 재협상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적어도 우리 정부 예산에 이 10억 엔을 반영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시다시피 TF의 목적이 합의의 경과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본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예단적인 성격이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초적인 판단이 아직 정부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관님 말씀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뭐

12월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무슨……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한 1주일만 조사해도 진상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언제부터 12월 달까지 끌고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재개정하고 우리 한을 풀어 달라고 하는 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 아닙니까? 그것 생각하시면 정부가 이것을 12월 달까지 이렇게 여유작작하게 끌고 가시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안부 TF의 위원들이 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정부가 12월 달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는 거지요, 국가예산을 쓰고. 그런데 여유작작하게 이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방향은 서둘러서 한다는 것보다는 꼼꼼히 챙겨야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고……

**○이태규 위원** 아니, 꼼꼼히 챙겨도 체크할 항목이라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몇 달씩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회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만큼 민감하고……

**○이태규 위원** 그것을 12월 달까지 끌고 가야 될 정부의 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따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문희상 위원입니다.

모처럼 예산에 관한 질문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일 날 한중 관계 개선 관련해서 양국 간 합의 발표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희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번합의가 존재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문희상 위원** 사드 보복과 안보 포기를 맞바꿨

다는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희상 위원 이 엄청난 상황에 모처럼 양국 간의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의에 관련해서 이것을 폄훼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양국 협의의 결과이지 합의문이 아닙니다.

○문희상 위원 협의건 합의건 그 문서에 중국 측 우려로 명시된 사안이 세 가지가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존 정부 입장입니다.

○문희상 위원 기존…… 문재인 정부 내지는 그냥 유지해 온 기초 아닙니까? 또 ‘MD 불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 공조다, 한·미·일이 동맹까지는 맺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가 일관해 온 안보 기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오히려 3불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말일 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어 단어, 우리말로 ‘승락’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약속’으로 해석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외교부 측에서도 표현을 바꿨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냥 입장 표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래서 정정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했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최대 안

보 위협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라는 항목은 남방과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남방정책은 말하나마나 동남아와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 전략이고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기상을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소위 문재인 구상의 일환으로 이런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이런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삭감돼서 문재인 정부가 첫 출발을 던지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 저는 우려됩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6자회담 참가 등 국가 핵 문제 대처 사업에 2018년도 예산이 2017년도 대비 6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한중 관계 회복이라든지 한·러 관계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미 대화성이 앞으로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 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자회담 참가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 6자회담 관련해서 양자·다자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책정이 2017년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미집행액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축소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재가동될지 모르는 6자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 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해 주시면 활동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6자회담을 기피 내지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것을 기계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예산안이 감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정하는 데 국회도 국회려니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참여정부 때의 6자회담 비용만큼만 증액돼도 괜찮겠어요. 그때 비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문희상 위원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 사업은 6자회담에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사업을 우리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것 하나와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감시 및 검증 방안 협상과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비 총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 북핵 문제는 우리의 최대 안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9월 6일 러시아에서 두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한·러 양국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 과학 기술 보유국이고 또 에너지 산업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 봅니다. 북방 정책의 핵심이고 러시아 외교의 강화가 더 필요한 이유이고 다시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외교 방향에도 기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교부는 한·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4억 원과 함께 신규사업 예산 12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희상 위원 신규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서 푸틴 대통령과의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시 여러 부처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이행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은 전년도 대비 9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여건이 어려워져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한·러 관계 급진전과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감안할 때 이 사업 추진도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9200만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희상 위원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러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외교 추진 기반 구축 사업 3억 원 신규 증액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을 문재인 정부의 96번째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대 공약 중에 96번 공약입니다.

이 중 국민 외교 시스템 구축은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예산정책처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방금 하신 검토의견에도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외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마련하는 가운데서 비용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홍보비용을 증액해 주신다면, 국민 외교를 출범시키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문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고 있는 최대의 안보 현안인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외교부장관께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보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안을 보면 미국, EU,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더 소극적이고 유엔 틀 안에서만 제재안을 만든 지극히 알맹이가 없고 형식적인 그런 제재안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대북 독자 제재는 그간 대통령께서 7월에 지시하신 이후로 죽 검토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제재 대상을 정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5·24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거의 북한과 교역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어떤 제재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가 제재 리스트를 짚는 것이 사실 굉장히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기조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짚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독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형식적이고 동맹 국가의 어떤 코드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의지와 또 그러한 판단 속에 해 나가야 되는데 외교부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재외공관에 나가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재외공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니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거의.

유엔의 대북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회원국의 이행 사항 체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이번 예산?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에서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북핵기획단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축비확산과에도 있고요. 여러 과에서 이것을 분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우리 강 장관님께서 즐기치게 주장하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셨는데 최소한 이 주장과 관련돼서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별로,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장관님께서 늘 하시는 제재와 압박, 입에 달고 다니시는데 그걸 제대로 해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 나가야지,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안질의 하나 더 있는데, 3살짜리 유아 포함된 탈북민 10명이 지금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에서 체포돼서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장관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그런 기본 입장에서 관련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또 관계 국가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인도적인 차원에서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정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해서 중국 공안 당국,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

의해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강 장관님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농업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성공한 국민운동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작년에 UNDP와 함께 유엔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세계적인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된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서 새마을운동의 할 수 있다, 캔 두(can do) 정신이 세계로 전파되면서 지구촌에 절대빈곤은 종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절대빈곤 상태를 50년 만에 종식한 위대한 일을 성취한 국가로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상징적인 국민운동입니다.

정권과 정치를 떠나서 성공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저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또 전 세계에 우리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저도 해외 출장을 나가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과 또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방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시책을 계속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데에서 국제 개발원 조위원회, 이 국제 개발원조 사업 전반을 점검하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그 브랜드가 지나치게 분별없이, 그냥 새마을운동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개발원조 사업에도 사용이 됐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그야말로 새마을운동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브랜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자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업의 속성에 맞는 이름을 갖고 가자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새마을 지원 사업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KOICA와 관련돼서 예산 관련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KOICA 직원들의 퇴사율이 21%나 돼요. 보수도 전체 공공기관 344개 중에서 281위. 아주 낮아요.

1991년도 창립 당시 174억 원에 불과했던 사업비가 26년이 지난 지금 약 8500억 원으로 49배 증가했지만 인원은 201명에서 340명으로 0.8배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사업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은 직원의 퇴사로 이어졌고요. 총 입사자 337명 가운데 지난 8월 현재 71명이 퇴사했어요. 매년 입사자 중 입사 5년 내 퇴사율이 무려 20% 이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KOICA 직원 대우가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은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OICA 직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는 KOICA 이사장이 임명이 되시면 이사장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원유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한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점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양측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누차 강조했듯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이 한·미·중 3국이 3인 2각 체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만큼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상회담이 양국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북핵 문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병석 위원**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의 심화가 대립되는 개념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도 필요하지만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제일 많이 미치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다 하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지금 일부 시각이 마치 한중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면 그것이 한미동맹 관계에 흐름을 주는 것처럼 대립적 개념이나 아니면 제로섬의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한반도 핵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준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간의 단단한 공조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한중 간 또 미·중 간 또 한·미·중 간 여러 계기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중국의 3개국이 공동의 인식을 하고 공동의 수단을 합의할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크게 확대됐는가 하는 반면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잘 조사하고 백서를 남김으로써 동일한, 비슷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백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아도 외교부에서 신사업으로 과거의 중요한 협상에 대해서 그것을 문서화해서 교훈으로 남기는 그런 책을 발간할까 하는 것이 저희 신규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사드 관련한 한중간의 협의를 어떤 시범 케이스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국가 간의 민감한 외교 협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일부 외교적 사안으로 어느 기간 동안 비공개할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해서 이병기 전 청와대 실장이나 윤병세 장관을 면담해서 조사한 바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TF에서 면담할 분들을 정하고 그 면담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미 면담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어떤 분들은 했고 아직 못 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개성공단의 급작스러운 폐쇄가 설사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이나 절차의 과오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분야에 관해서도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서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이나 통일부장관이었던 홍용표 장관의 직접 면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도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당시 관계되는 분들과 직접 면담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된 이병기 실장과 윤병세 장관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과 홍용표 장관의 면담조사는 어떤 웅징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면 교훈의 차원에서도 꼭 기록하고 다음에 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이 2017년도, 즉 올해 예산이 19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76억으로 20억이 줄었습니다. 금년은 특히 우리 국내 정세의 혼란스러움으로 해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외교가 없었던 시기인데 또 내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상들의 외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인데 정상급 외교가 위축됐던 금년보다 더욱 활발해야 될 내년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것도 아까 북핵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이유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정상 및 총리 순방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서 예산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아서 올해 자동적으로 낮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하에서 정상외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총리 외교 사업에 추가 예산 배정을 꼭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기본적인 예산의 큰 틀이 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종 제출할 때까지는 3~4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정상외교는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집행 미흡이라는 이유로 그 예산이 10% 삭감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결정한 것은 우리 기재부나 외교부나 두 부처가 다 문제가 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정부 자체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직된 시각으로 예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이 정상외교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이런 멍멍백백한 사업에서 교조적인 틀에 얽매이는 것은 정부가 고쳐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중국과의 3불 약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아니라는 거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뭘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입니다.

○윤상현 위원 기존 입장의 표명이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정정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정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정정했어요, 입장 표명?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약속이든 아니면 입장 표명이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하겠다고 중국에다가 사실 확인해 준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설명해 주고, 또 사드의 추가 배치도 없다고 미리 확인해 주고, 또 한미 군사협력이 한미 군사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다짐까지 해 줬어요.

이 언급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언급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나도 분별이 없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전략 구축 방향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타국에게 확인시켜 줘라. 그런 권한이 정말로 외교부장관님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세 가지는 NSC 차원에서 정리된 우리의 기존 입장입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하고 얘기해 보

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 차원에서는 국방부 하고도 긴밀히……

○윤상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이런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하고는 사전 조율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 차원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청와대에서도 사전 조율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발언 말씀 세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그 용어 선택이 맞다고 보십니까?

뒤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 외교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까? 그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약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외교부라는 게 뭐니까? 결국 우리 미래 군사전략에 대해서 중국에게, 타국에게 알려 주고 중국의 양해나 허락을 받아 오는 기관으로 전략해 버린 꼴이다, 제가 보기에.

장관님, 미사일 공격 시예요. 장관님, 만약에 외교부 공관, 장관님 공관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비상경호팀이 가 가지고 장관이 가장 먼저 안전대피처로 옮깁니다. 일반 국민들은 안전대피처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안전대피처로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니까. 정말로 그 위기 시에 장관님의 목숨하고 일반 국민하고의 목숨에 엄청나게 차이가 다른 상황에 처해 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MD 체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MD 체계 구축합니다, 우리 KAMD, 또 성주에 사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노동 1호 미사일을 고각 사격으로 해서 서울에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방어합니까. 적어도 그런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드의 추가 배치입니다.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나라라면 당연히 사드의 추가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

고각 사격으로 해 가지고 노동 1호 미사일이 지상 고도 300km에서 떨어질 때, 서울에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PAC-2·3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40~150km는 사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상은 SM-3 미사일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또 할 용의도 없고 그냥 던져 버렸습니다. 중국하고 합의까지 해 뒀습니다. 정말로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있는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과의 합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요.

○윤상현 위원 하여튼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윤상현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군사……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군사자산의 배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저는 미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해서 정말로 허투루 얘기했다. 이것은 국민에게, 역사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그 사드 협의회—그래, 협의회가 아니라, 협의—거기에서 도대체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협의를 한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에서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사드 보복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사드 보복 자체가?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는데 부당하고 황당한 보복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설득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익의 균형이 전혀 없습니다. 균형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 과정에서……

○윤상현 위원 보복 피해 없어진 것?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중국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보복 피해가 이게 부당하다’, 왜 언

급 자체가 없습니까? 유감 표명도 없고 재발 방지 언급도 없고, 우리의 외교·안보 주권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훼손시켜 버렸다. 제가 이 합의문을 보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은 생각 안 하시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 여기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합의문이 결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정말로 삼전도의 굴욕 같은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추가 배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러한 막강한 외교 카드를 스스로 던져 버립니까? 외교 카드 아납니까? 그런데 왜 외교 카드를 스스로 던져 버립니까, 도대체?

장관님은 정말로…… 물론 청와대하고 조율해서 하겠지만 어떻게 이 막강한 외교 카드를 스스로 던져 버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뜻하지 않은 외교 대박을 터트렸고요 우리는 외교 쪽박을 찼어요, 외교 쪽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결국은 국가 안보실 작품이다. 황당한, 계속해서 나오는 이 황당한 안보 패착들 결국,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다. 뒤에 계신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 한중 외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발표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국 측과 한중 간 교류 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것은 그것입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 하여튼 너무 말이 안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좀 전에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니,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통령께서 7월 29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대북제재가요…… 도대체 독자 대북제재가 뭐니까? 유엔 안보리 제

재에 추가로 더 강력하게 추가하는 강력한 플러스알파 제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독자 제재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하지말지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에서 설명합니까? 왜 관보에 0시 0분에 딱 게재하고 끝납니까?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면 당연히 NSC든 외교부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시능 제재’만 하고 있다, 시능 제재.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요 시험지에다 이름만 써 놓고 딱 나온 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이클 그린이 백악관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북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일본, EU, 그다음에 중국, 대한민국은 꼴찌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맨날 ‘대북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로 도대체 이것을 외교부가 합니까, 통일부가 합니까?

저는요 이것도 보면서, 미국이 26명 제재 리스트에 올린 사람 중에 8명 빼고 16명만 올려요.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이런 독자적인 대북제재……

장관님, 이 뒤에 앉아 계신 외교부 고위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머리 짜내고 그분들이 정말로 멋지게 뜻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아예 고위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말로 영혼이 살아 있는 외교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독자 제재라고 트럼프한테 내보였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해, 한미 관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이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쳐서 어떤 아는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떠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이번에 몇 가지 발표했는데 크게 박수 치고 싶어요.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그리고 균형외교,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자주독립국가임을 명확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청문회 때 여쭙본 거 있지요? 청문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 작년엔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어지자마자 청일전쟁·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강창일 위원 현재 일본이 북핵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려고 하고, 북핵 문제를 이용해서 핵무장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언제 또 다시 큰 힘을 가졌을 때 한반도에 들어올까 모든 국민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정서·감정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침략전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더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옆집에 강도가 있는데, 과거에 강도짓을 했는데 강도짓 하지 않았다고 하니 우리가 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옆집의 강도가 반성을 했으면, 사죄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독일은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군사력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사죄 없이 우물우물, 옆집에 강도를 갖다 놓은 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 불가, 균형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안 된다. 정말 강 장관께서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의 자주독립 국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사대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본래 제가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만 하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답변해 주시고, 예결소위 할 때 참고로 하겠지요.

우선 통일부 말이지요,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향상과 대학 내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지금 6개만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경상북도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강원도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데도 선도대학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통일부장관 조명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창일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데만 만들고, 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해야 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미래센터 직원들 숙소도 필요하고, 길거리에서 잠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직원 숙소 신축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이분들 따뜻한 동포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하층에 가서, 이상한 서비스업에 가서, 활용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귀농, 이런 데도 아파트를 지어 줘야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강창일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외교부도 좀 있는데……

우선은 재외공관 말이지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외 국감 나가면서 전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더구먼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는 문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계속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반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마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이번에 공공외교 이 부분은 공사, 공공외교대사를 넣을 정도로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강창일 위원** 우리도 OECD 선진국답게 해야지요, 말로만 OECD 국가, 선진국, 선진국 하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팍 깎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이쪽이 옛날식의 탈상, 옛날식의 인식만 가지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기재부 쪽 만나서 잘 이해, 공공외교가 뭘지 이런 용어도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외통위 위원님들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야 관계없이 공공외교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4년간 지속되다가 2016년도에 지원 중단된 유엔 세계 평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파악 못 한 부분입니다.

○**강창일 위원** 이게 계속 지속되다가 작년에 중단돼 버렸어요.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이게 큰 예산도 필요 없는 건데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국민 외교라는 말이 말이지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외교를 국민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지금까지 외교부가, 늘 외교 공무원들이 비판받았던 것 하나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외교관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 외교라는 큰 틀을 만들어 낸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사업도 해야 되지요, 말로만 국민 외교, 국민 외교 할 게 아니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여기에 많이 있는데 기재부에서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예결소위원회 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이것저것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날 한국에 도착을 하는데, 한국을 방문하는데 현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금년에도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관을 둘러싸고 소위 인간 띠 잇기를 통해서 좌파 단체들이 반미 시위를 하고 또 촛불 행진을 하고, 또 인간 띠 잇기를 하면서 ‘양키 고 홈’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서 또 상당히 심각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8일 날 오전 국회 연설에 맞춰서 국회 앞에서도 그런 시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당히 많은 수의 집회 요청서가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윤영석 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국민 방문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방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이러한 시위가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미국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진하게 환영을 하고 대접하고 있는 일본 방문과 대비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 내 반한 감정이 상당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시위나 이런 집회가, 반미 시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금 70%가 넘고, 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7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들 뜻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들께서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소위 균형외교를 하겠다는데 말이 좋아서 균형외교지 이것은 양다리 외교입니다. 양다리 외교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한국전쟁을 같이 치렀고 혈맹이지요. 그런데 중국은 남북 분쟁 발발 시에 조·중 상호원조조약에 의해서 북한을 즉각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개입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이 결국은 가상적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한 스탠스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위 3불 약속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NSC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침이 아무런 조건 없이 확

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세 이슈가 논의가 돼서 세 입장이 하나의 회의에서 정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러 계기에 국방부장관 또 저, 여러 계기에 세 가지를 같이 또는 각기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러면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결코 검토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 위원** 상황 변화가 있으면 추가 배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상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의 어떤 진전 상황이라든지,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다면 추가 배치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윤영석 위원** 한국형 KAMD 체계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볼 때도 2020년대 중반에서나 거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약 7~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술로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사실상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PAC-3, 또 MSAM, LSAM 이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렵고 현재 미국에서 개발한 이러한 사드라든지 또 SM-3,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SM-3 또 육상에서는 사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SM-3는 요격거리나 고도가 사드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장거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지스함에 SM-3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또 극렬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그러면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상황 변화,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 상황이 변화되면 정부 내 검토를 거쳐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MD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도 필요하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발전시킬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지 왜 가능성을 닫아 버립니까?

그것은 상당히 큰 실책이고, 아마 외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중국이 뭔가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을 분명하게 수정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외교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사드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기본입장이 국익 차원에서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가 안 된 부분에서는 그간 소통을 많이 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그 협의 결과라는 게 나온 거고요.

수도 지역 방어 또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는 한미 간에, 국방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군사자산의 최적의 배치를 통해서 방어태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정상 간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개발하고 획득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국방 당국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는 결국 최선이 사드와 SM-3입니다. 해상에서는 SM-3, 육상에서는 사드인데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결국은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실책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SM-3나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과거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무슨 것이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으셔서 꼭 그런 것을 가능성을 열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한다.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것 설립하겠다고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무슨 외교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 갖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민 외교라는 담화를 시작해서 국민외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법령 근거가 없지만 몇 년 간의 그런 어떤 시범적인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민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외교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관련법을 제정한 후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듣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한중 간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긴 하되, 다만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관행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이게 균형에 전혀 맞지 않는 협의 결과다 하는 점, 그다음 세 번째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또 양자 대표 간에 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행적으로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중국한테 뭘 안 하겠다, 뭘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 표명이라고도 하고 또 약속이라고도 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입장 표명했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볼 때는 ‘아, 그게 너희들이 우리들이 우려 표명한 데 대해서 이러이런 한국 측이 공개적으로 정부가 밝혀 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약속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우기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어적 필요에 의한 주권 포기 절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여러 가지 방어무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도 얼마든지 우리 군사주권상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또 미국 측에서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요구하고 나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또 SOFA 이런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양국 간 한미 군사동맹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슨 입장 표명 또는 약속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이런 관행은 양국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 가고 외교적으로 타결해 가는 그런 데서 좀 예측적인 그런 관계로 격하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이런 협의를 했다고 하면 사드를 넘어서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요, 균형을 잃지요.

그런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든지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방위 차원에서, 특히 동해상의 대잠수함 방위력 문제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 부분이 더 강화될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미리 내주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보복 중단이라는 어음을 받고 3불 약속이라는 거액 수표를 발행해 준 격이다. 격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균형을 잃은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외교 문제를 양국 간에 발표할 때에는 외교부 대외교부로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 중국 외교부 이런 관계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부는 바이패스된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외교부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차관급이 나가서 했고 중국은 외교부 부장조리, 부장조리면 차관보급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이것은 대등 외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협상 파트너의 격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점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외교부는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협의 결과의 수준이 약속까지 아니고 입장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간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군사주권, 또 필요한 외교적인 관계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입장을 가질 경우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 들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중국 외교부 그리고 우리 안보실에서 주도가 되었다. 그렇지만 외교부도 직원이 늘 그 협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 직원을, 참석하고 제 뜻을……

○**이주영 위원** 협의에 참석했지만 외교부 대 외교부로 발표가 됐어야 맞지요. 대한민국은 청와대인데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도 외교부가 아니라 국가주석실에서 나왔어야 되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가주석실에서는 우리의 안보실에 해당하는 그 상대역이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어쨌든 거기서도 상응하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격이 안 맞는다 하

시는……

○이주영 위원 그런 사람이 나와서 협의했다 하고 발표를 해야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지금 아주국 부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 부장조리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이 안 맞는다 하시는 것은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의 표명이었고, 또 한·미·일 관련해서는 안보협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협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것이 군사동맹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예,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이제 탈북해서 우리 국민이 되어서 지난 11월 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 핵심이 뭘니까,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이?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파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기 전에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한한테 국제사회의 그런 목소리, 메시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정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북한 사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김정은 측근에서 이해를 많이 해 온 사람이에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투자도 미군을 따라서 철수하고 한국의 엘리트와 기업들 역시 따라 떠날 것이다, 이게 북한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식의 계산이라는 것이 이번 태영호 공사의 발언 핵심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과거 베트남 패망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3불 입장을 우리 정부가 표명한 데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3불 정책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을 정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 MD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계속해 왔던 얘기에요,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이것도 실은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서 3정상회담하실 때, 그러니까 트럼프·아베·대통령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베 듣는 데서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표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역사도 있고 또 한일 간 국민감정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위안부 문제 등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군사동맹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동맹으로 나아간다면 미국이 오히려 또 일본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리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명분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런 세 가지 사항은 실은 우리가 기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인데 또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몇몇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가서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도 만나고 또 푸잉 외사위 주임, 우리로 말하면 국회 외교위원장 격이지요. 푸잉 주임은 참 두발도 백발이고 영어도 잘한다 해서 강경화 장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등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중국의 분위기가 10월 31일 우리 발표 이후에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사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자기들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사드로 인한 입장은 입장이고 또 경제로 인한 현실은 현실이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1월 3일 날, 우리가 10월 31일에 발표했는데 11월 3일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중국이 10월 31일 우리 입장 발표 이후에 첫 유화 조치를 냈어요. 그게 뭔지 장관님 혹시 아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석현 위원 국내에 이상하게 지금 어디도 언론에 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일인데. 뭐냐 하면 롯데가 사천성의 주도인 성도, 청두라고 그러지요, 청두. 청두에 대형 복합쇼핑몰 허가를 내려고 2년 전부터 노력을 해 왔는데 허가를 안 내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 3일 엇그저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첫 조치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던 규제들이 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얘기는, 말을 시켜 보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국민정서가 그랬던 것이고 국민들의 그런 불편한 정서가 SNS를 통해서 빠르게 번져 나갔기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현대차도 안 팔린 것이지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계속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만 어떻게든 사드로 인해서 불편했던 관계들이 얼음눈 녹듯 녹고 있는 것이 다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냐 하면 바로 제일 걸끄럽게 여기던 롯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조치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아마 유화 조치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큰 국익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런 국익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10월 31일 조치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잘했다—청와대가 했던 정부가 했던 양쪽이 다 도와서 한 것인데—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대북제재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발표했는데 18명 중에 14명이 지금 중국에 주재 중인 북한 금융 관계자들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이런 제재가 중국에 불편을 준다거나 중국을 거스르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셨듯이 14명이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명은 안보리 결의사항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며 우리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 각급에서 중국과 전략적인 소통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고 우리의 이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국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있고 거기에서 무역 역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되지요? 한국에 와서도 틀림없이 한미 FTA에 관한 얘기를 꺼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석 연휴에 미국 갔다 와 가지고 존스홉킨스대에 있는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 적이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보호무역자다. 그래서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광고를 냈을 만큼 보호무역자고, 또 적극 지지자들이 보호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 때 해 놓은 말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한미 FTA에 대해서 가능하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어떤 양보를 받아 내려고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것은 아마 정부 산하기구지요.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미국이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400억 불 이상 적자가 났을 텐데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200억 불 무역적자가 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그런 결과, 합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미 FTA에 관해서 지금 두 번 만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갔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세 번 만나면 그런 자료들이 앞 세워져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런 내용이 미국 언론에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미국 언론에도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왜냐하면 미국 언론은 한국 FTA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여러 걸음 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FTA에 관해서 양국 간에 득실이 뭔지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간담회를 경제학자들이 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필요 없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다. 그냥 한미 FTA는 나쁜 것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돼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설득을 해야지만, 미국 언론에도 우리가 자주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미 FTA 개정 협상 필요에 대해서는 지난번 두 번째 회기 때 합의를 했고요. 우리는 국내 절차를 지금 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 완료 후에 아마 협상이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호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최근에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그것을 봐도 아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덮어놓고 대신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푸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충분히 되어 있는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팀을 구성 중입니다. 아직 발표 단계는 안 됐는데요.

○이석현 위원 제 말씀은 방위비 구성보다도, FTA에 대해서 3차 회의 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요, 로버트 하이저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FTA가 이렇게 양쪽에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앞으로 협상을 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대학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3불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외교·통일정책 현안과 관련해서 3불이 등장을 했는데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됩니까, 이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썄요, 정부의 입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북핵이라는 그런 위협을 앞두고는. 그렇지만 이것이 군사동맹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썬,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자는 거면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한미 군사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미래적인, 전략적인 어떤 나쁜 영향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해서 가지고 명확하게 대처하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MD 체계 관련해서요.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 구조 속에서 미국과 군사적인 협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직적으로,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협력하는 것과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KAMD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KAMD를 구축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자주적으로 연합하거나 협력하려고 하는 길을 비전으로 가져가는 것과 수직적 종속도 감수한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외교·통일적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군사 전문가나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군사 전문가들은 KAMD를 통해서 자주적인 연합과 협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거고,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부가 자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럴 때에 MD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입장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드와 MD는 무관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정부는 MD 체계의 참여와 관련해서 검토한 적 없다 이런 게 우리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도 얘기했던 입장인

것 같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적 팔로우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특정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사드의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인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대체로 평택이나 오산 이런 곳들이 검토됐었던 것 같은데 그곳으로 하지 않고 미군이 성주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도 군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 보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대응 논리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평택이나 오산에서 하는 것들이 각도·시간·거리 이런 데서 대응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성주로 옮긴 것 아닐까요? 그냥 단순한 민원 때문에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낮은 수준의 추측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들도 분명하게 해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도권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은, 사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북한에서 개발되고 또 고체연료 장착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킬체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일까 이런 의심을 하지만 킬체인 시스템이 사실 그런 것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은 군사 전문가들의 군사·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만들면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군사·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나 국방 관계자들이 답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하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평택 같은 경우는 원유철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니깐 한번 말씀도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제일 중점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한반도 평화 조성 사업 이런 것 아니에요?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한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왜 줄여 놓으셨어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한 사업비가 줄었고,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과 관련한 사업비도 줄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과 관련한 그 사업비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 준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렇게 준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리 설명드렸듯이 매해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인영 위원** 글썽, 그렇게 반복적인 말씀 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획일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흡한 부분 100개 과제 중에 15개를 선정해서 10%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줄여 가면서 점점 더 미흡해지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실 많은 부분을 복구해야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오늘 사업 보고하실 때도 보면 내년에 국면 전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면 전환하면 이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더 활발하게 벌이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안 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사이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장관께서…… 제가 그 뒤에 다른 사업 보니까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이런 예산이 무려 16억이나 편성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도 되잖아요. 사실 제가 해외 국감 같은 것 다녀 보면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긴급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영역에서 점검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재부하고 협의 결과가 국회에 온 거고요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특히 북핵 외교, 평화 외교 관련해서 한 4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인영 위원** 그것은 증액을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계속 다 빠져 있고, 제가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그러니까 169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해 오셨던데 이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데요. 이것을 조사해야지 탈북 주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정책 수행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의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서 탈북민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대대적으로 이루어 내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의합니다. 하나재단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백 마디 탈북자 대책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독자 제재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정보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가 내리는 결정은 아닙니다.

○홍문종 위원 내린 결정은 아닌데 하여간 어쨌든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NSC 차원에서 충분히 실무 차원에서 또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이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정책상으로도 독자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꼼수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저희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드리고 싶은, 자꾸 이렇게 서로 어깃장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래 가지고 대통령 오는데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했다는 것을 생색내고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이것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대통령한테 약 올리는 거지요. 관보에 밤중에 게재하고, 밤중에 그냥 넣다 빼고 말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장관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장관님께서 외교부를 아주 당당히 지켜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내셨겠어요?

저는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없는……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천명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오히려 천명하는 게 낫지요.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의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우습게 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냥 제 의견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킬러스 장관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부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미 상당한 대북제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검토 결과 이런 18명의 리스트를 관보 게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잘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꼭 인

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장관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홍문종 위원**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MD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이런 걸 얘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정부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압니다. 우리 회사들이 들어가서 힘들고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또 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전례로 남는 거다 이 말이지요. 뭐 MD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고 안 하고가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약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다 그야말로 삼전도 굴욕 문서처럼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낙’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얘기 바꿨다면서요? 외교하는 사람들이 그 ‘승낙’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항복 문서로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무슨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MD 체계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돈 몇 푼 벌었던 것 중국이 사드 제재하느라고 우리가 몽땅 다

까먹었잖아요. 수십조를 날려 버렸잖아요. 그것은 아무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과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재발 않겠다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항복 문서 써 줬어.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걸 뭘 잘했다고 찬양가를 부르고 무슨……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이 협의 결과를 정리한 거고요. 그 결과에 나온 문서 내용을 그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약속한 것 없습니다.

○**홍문종 위원** ‘미국의 반응’ 이래 가지고,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장관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웃기지만 이미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맥메스터가 어떻다, 에번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가 어떻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소 부소장……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미국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중국에 기울어질 건지 워싱턴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학계·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 결과를 보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킬러슨 장관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저희는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 장관님이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꼭 경제적으로 그동안 우리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꼭 중국이 최소한도 미안하다고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해야 될 것 아니에

요? 우리가 받아낸 것은 뭐니까, 도대체?

통일부장관님, 우리가 북한에 800만 달러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홍문종 위원** 그게 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이 됐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됐건 이게 말하자면 군사용품으로 변해서 장마당 거리에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게 지금 북한에서 교묘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제기구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와주는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도록 좀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찰도 하시고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번에 한중 합의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그저 한중 간 비밀 협상이나 협의에 의해서 한중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틀림없이 사전에 한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미국의 동의를 받고 '좋은 생각이다' 하는 양해를 받고 중국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늘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이수혁 위원** 제 경험으로도 제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미국에게 미칠 영향이

큰 문제를 미국과 상의 없이 한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미국을 패싱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상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왕왕 우리가 협상의 실질적 과정이나 메커니즘을 이해 못 하면, 그러니까 협의 내용 결과만 가지고 보면 다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 같은 추측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외교 문제는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제3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관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뭐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통일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나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문화일보기고문을 제가 보여 준 게 아마 통일부 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1.5트랙에서, 그러니까 이미 퇴직한 외교관 또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하지만 그분들도 정보가 없거나 또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정부 관리들이 얘기한 것에 더 비중을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지 학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론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불 정책에. 하지만 가끔 각론보다는 총론이 합리적이면 그 각론보다는 총론을 보고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개개 구성 분자들이 서로 모순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합리적 아닐 수 있어도 총론에서 합리성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하면 그 각론은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는 다른 국가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놀라게 해서 반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이 미국을 놀라게 했을 리도 없고, 또 놀랐던 중국을 달래기도 하는 외교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제일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교 역량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여러 이벤트성 사업 예산들이,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가 이 형국으로, 이 경향성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좀 불길하게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외교부는 아마 삼류 부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직업외교관들은 행정·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주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외교 업무는 각 부처나 또는 전문가들이 파견돼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지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상당 부분 주요 업무가 직업외교관이 하지 않고 주재관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와서 행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참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주요한 정책들도 있고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있지만 외교 역량 강화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같이……

저는 여성을 폄하하거나 그러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고시 중에서 외무고시만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70%가 넘었기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다 하는 어떤 조항으로 몇 명의 남성을 더 추가 모집하는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금 70% 이상 들어온 여성들이 외교부의 주류가 될 때에 그게 다른 부처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성비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 외교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며, 여성의 능력이 낮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성비가 조성되지 못하는 이런 추세는 외교부의 평가, 외교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무고시가 아니라 국립외교원 시험인데 그 수준이 매우 저하됐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향성을 외교부가 자각을 해 줘서 외교 역량 강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관들 훈련 예산이 모자라서 매년 필

요한 인원을 못 보내고 있다. 그런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점도 좀 신경을 쓰시고.

다른 하나는 저도 경험한 건데 대사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행정직들,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좋은 보고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행정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매년 숙원사업인데 안 해 주고 있어요. 외교부가 못 얻고 있고 설득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도 반영이 됐던데 그걸 좀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직원들의 능력을,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대사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이것은 제가 재직할 때 그 훨씬 전부터 제기되고 대사들이 항상 건의하는 건데 안 해 주고 있어요. 돈 몇백 불만 더 주면 좋은 인력 구할 수 있는데 아마 중 내지 하급 정도를 대사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거지요. 그 점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연수 인원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2분도 안 남아서 나중에 답변을 좀, 제가 제 시간 다 쓰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센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삼십 년 안에 제2의 사무총장이 나올 수 없겠지요.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활용하고 그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입니까, 100만 불 예산 지원한다는 게? 아니면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은 아직 이게 국제기구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외교부의 국제기구 분담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 사업에는 분명히 그 규정상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예산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여금의 지불은 이 센터가 내년도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 사업을 지원하는 MOU를 맺은 다음에 그 예산이……

○**이수혁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질문은 100만 불이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장관인 저로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매년 100만 불씩을 이 센터에 지원하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매년 10억, 11~12억을 매년 이 센터 사업으로 지원하겠나?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게 국제기구화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내듯이 정례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혁 위원** 이 사업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계속사업에 타당한 명분과 사업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테고, 너무 방대한 사업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어요.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유엔이나 해야 될 사업을 조그마한 센터가 사업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건데 한번 그 목적 같은 것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외교관후보자들 60~70%가 여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관문이 낮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보자 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좋은 우수 인력들이 다 안 온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더 들어온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여러 시험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JPO를 저희가 선발할 때도 그렇고 추세가 여성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하여튼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일시적인 현상을 거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성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들어오는 여성 인력에 대해서는 남성과 차별 없이 역량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직무 분위기라든가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교 역량 관련해서 긴히 부탁드립니다 게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18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외 연수에 44명을 다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이 꼭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44명을 다 국외 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의견을 좀 모아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있는 외교 역량도 제대로 강화 훈련의 기회를 줄 수가 없다 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장관께서 국회에 출석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럴 때 어떻게, 뭐 준비하는 것은 둘째 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아니,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지금 특히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임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너무 급급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에 전 정부의 장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금과옥조는 아니더라도 잘 듣고 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또 그때 못 하더라도 다음에 정책을 할 때 참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유기준 위원**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독자 제재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제재안에다가 별도로 준비한 게 있으면 그게 독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단어를 해석할 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준비한 것을 보면 이미 미국이 발표한 사람은 26명 또 기관은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18명만 하고 6명은 제외하고 또 기관도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급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에 맞춰서 하듯이 이렇게 마지못해 답안지를 써낸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사람들을 죽 보니까 꼭 모 그 다음에 엠 모, 호 모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보면 조선금강은행 두바이지점 대표,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된 외화를 거둬 김정은 정권에 바친 이런 내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제재에서 빠지고, 또 은행으로 말하면 조선중앙은행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비이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조선중앙은행은 개성의 북한 노동자 급여 지급에 관해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또 이 은행에서는, 지난번 여기에서 나온 급괴가 한국에 반입된 적도 있어서 미국의 항의도 받고 이랬던 그런 은행인데……

자, 그러면 조선중앙은행이 빠진 것을 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가는데 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조선중앙은행만 먼저 봅시다. 북한의 중앙은행.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18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유기준 위원 18명은 조금 이따가 제가 묻고요.

북한 조선중앙은행이 왜 빠졌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정보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부 내에 있는, 특히 정보 당국에 있는……

○유기준 위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십니까, 내용?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모르겠…… 정확히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두 사람, 광하고 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중동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급여로 지급한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바친 사람, 이 두 사람을 빠뜨렸어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하나은행 중국 단둥지점 대표는 거액의 달러 거래에 관여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여덟 사람을 빠뜨려 가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하는 이게 독자 제재인가요?

독자 제재라는 것은 다른 데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제재에 비해서 적은 규모로 하는 것이 독자 제재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합리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보다 유연한 제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표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독자 제재라고 했습니다만 예컨대 EU는 오토너머스 생션스(autonomous sanctions)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안보리 제재를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EU 차원에서 채택한 제재를 오토너머스 생션스 이렇게 부릅니다.

○유기준 위원 서플러멘터리(supplementary)로 해도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보충 제재라고 하는 것은 주제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른 것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재를 해야 보충 제재든지 독자 제재 그런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지 주제제에 있는 것을 다 그 안에 넣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독자 제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핵심은 제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지요.

제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생션이라는 말이 맞는데 앞에 독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서플러멘터리로 하든지 어디셔널(additional)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그게 독자 제재가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디펜던트(independant)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래 나와 있는 그것도 다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독자고 보충이 되겠습니까? 용어의 사용례가

잘못된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중국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 지금은 3NO 정책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우리 사드, 전술핵 재배치를 중국에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그때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 디펜스) 불참하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약속을 했음에도,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실리를 얻고 중국에 명분을 줬다고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약속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입장을 반복했을 따름입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유커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두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업 인가권을 하나 줬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얻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을 자꾸 장관님께서는 그게 문서로 서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국가 간의 프로토콜(protocol)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아주 형식적인 개념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질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에도 중국과의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여러 번 반복을 한 것이고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APEC 가지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거기 가서 이것 좀 확인을 하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추가 배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MD 불참 이런 것까지도 바라고 있는 사정인데 중국은 사거리 500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주에 배치하고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공망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해서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의 MD도 참여하지 말고, 또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안보적 필요와 국익에 따라서 내린 우리 결정이고 우리 입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의 기존 입장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 3NO 정책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뭐 정책이라는 것이……

○유기준 위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것보다 더 심한, 미사일 효능이 더 큰 것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방공망도 더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북한이 지금보다 더 큰 형태의 ICBM을 완전히 완성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수정도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드 재배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국가 간의 관계는요 그게 동적인 관계로 해서,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장래까지 예상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게 항구불변의 상태로 국가 간의 관계가 적어도 50년, 100년 동안 고정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바로 그래서 한중 관계 향후 25년을 보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의가 있었고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기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박주선 위원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 또 'MD 체계에 편입을 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라고 한다면 숨기고 감추고 전략적 모호성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국회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은 안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답변도 거부하면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답변을 소상히 하고 그러는데 이 자세가 맞습니까, 지금?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처음 밝힌 것이 아니고 누누이 여러 계기에 정부가, 저뿐만 아니라 안보 당국에서 다 얘기한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서 답변하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또는 NSC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언제 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논의를 하면서 계속 정부가 지켜 온 그런 어떤 정책 포지션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안전보장회의에서 의제로서 채택이 되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사드는 앞으로 추가 배치 절대 안 한다, 그리고 MD 체계에

편입 안 한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렇게 결정을, 안전보장회의나 NSC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NSC에서 의견을 모아서 수립된……

○박주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언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회의록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날짜를 좀 알려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NSC에서 논의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날짜가 언제였나 그것도 못 해요? 내용은 발표하면서 그런 회의가 언제 있었다는 것도 공개를 못 합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중국 정부에다가 협상을 하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중국 측에서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알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중국 측이 뭐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적인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장도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그쪽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박주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3불, 우리 안보전략·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이 입장 표명을 요구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해 온 입장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존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중국 측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존 입장이 이렇다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썽요, 자세한 협상 현장에서의 대화를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존 입장이라 하는 것은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중국이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입장을 가지고…… 약속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

시는데 굳이 중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은 다 알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중국 측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이런 약속을 했고 승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되었거나 중국에서 이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사실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한 외교 협상 과정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밝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주선 위원** 진즉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진즉. ‘이 3불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NCND대로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든지 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줄줄줄 이야기해 놓고 말이지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이게 굉장히 전후가 맞지 않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박주선 위원** 이번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자 제재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고 실효성은 없지만 상징성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청와대에서 그런……

○**박주선 위원** 아니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청와대 발표가 맞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청와대 발표를 다 일

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모릅니까,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구체적인 표현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취지, 맥락은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제가……

○**박주선 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 대북제재는 이미 5·24 조치 또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그다음에 3·8 조치, 12·2 조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과의 거래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의미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겠습니까, 북한이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또 응징해야 된다는 태도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통일부장관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효율성도 없고, 실용성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제재 조치를 해 가지고 북한을 괜히 자극하고, 반목·갈등을 유발시켜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오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에이, 안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북한의 반응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실효성에도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또 우방국들과 연대해서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함께하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야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를 왜 안 해야 되겠어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북한을 살살 달래서라도 이 평창올림픽에 오도록 해 가지고 하나의 전기를 만들어서 남북의 대화 물꼬를 트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장정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틀림없이 NSC에서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은 이 논의가 됐을 때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 앞에서 외교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통일부로서는 말씀하신 평창올림픽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복원이라는 그런 판 위에서, 로드맵 위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의견은 제기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독자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도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구체적인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일이 확인해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공조해서 하는 측면을 이번 현 시점에서 고려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돼요. 정부 내에서 NSC를 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의 입장하고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의 입장대로 가 버리면 통일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 제재를 논의하더라도 평창올림픽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답변하신 내용 중에 NSC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3NO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 측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중국이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권 문제가 대두되고, 중국이 사실상 잘못해 놓고도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결과가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베 일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 전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인데 그 정책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거두었다 하는데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데 대해서도 공감이 있고, 그런 뜻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이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수단, 그리고 무력 동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로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 얘기는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못 받았고 또 언론을 제가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다 적극적인 북핵 해결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께서 천명하고 계시면서 부통령께서도 또 틸러슨 국무장관 등 적극적으로 이런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관광업계, 특히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여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추산은 없는 것 같고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추정하는 액수는 약 8조 5000억에서 22조에 달하는 것으로 다양합니다. 또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위원장의 말은,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약 120억 달러의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하의 중요 인사들은 이 문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중국의 큰 보복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유일호 전 부총리의 공언이었고, 피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윤병세 외교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 또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좀 마무리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힌 것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중 관계의 변화가 그동안 냉랭했던 북·중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노력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시 주석이 답전을 보내면서 북·중 관계에 변화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북·중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외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한중 협의 결과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고요. 그 합의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바랐던 것이고요, 우리 국민과 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교류가 활발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중 간 이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소통을 하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주는 함의는 중국이 대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과 보다 더 긴밀히 소통하고 미국과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함의를 북한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축전, 시 주석의 답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중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좀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축전·답전의 내용을 보면 5년 전 것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내용이 냉랭해진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 그런 교류는 계속 되지만 얼마 만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불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원혜영 위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외교부가 트럼프의 방중 메시지 관련해서 좀 조율한다든가 또는 파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나름대로 방중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삼국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는 어쨌든 중국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 목적을 같이하고 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와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시고 중국으로 가시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대중 메

시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예산 관련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JPO 신규 파견 인원을 15명으로 늘렸는데 요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래 봐야 원상회복이고 이것을 2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또 매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도 형식과 내용 또 장소를 좀 다양화하고 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주OECD대표부가 유럽 지역의 유학생들을 상대로 국제기구·글로벌 기업 진출 설명회를 했고 호응이 좋았는데 외교부 본부가 하는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와 중복된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어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총론으로서의 비전 제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기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잘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혜영 위원 그리고 감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필요성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단순한 감사 인력의 증원뿐만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평가 시스템 또 내·외부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과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정양석 위원님이 막 들어오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 국감과 겹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는 10분은 다 안 쓰겠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3불 입장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제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그때 장관께서 여러 가지 하신 답 중에,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게 어떤 답변이었는데 놓쳤어요.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아, 그게 중국을 향한 메시지였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장관님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입장’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은 이겁니다. ‘아, 우리 상임위장이 우리 장관께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장이었구나.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뭔가 준비된 또 기획된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장관이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 하셨다’ 그런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상대는 차관보급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실세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 차장, 차관급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협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또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관보급이 아무리 핫라인이라고 하지만 왜 우리 장관께서 청와대 대변인도 아닌데 그 사항을 발표했을까, 그것도 국회 상임위장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3불 입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아까 장관께서 답변할 때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 뭐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에 관한 우려와 전망은 또 현실로 나타날지라도 적어도 주도권을 쥐지 못했으면 나는 외교부장관님께서 마지막 자존심으로서 ‘내가 관여하지 못했으므로 청와대가 발표하시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들고, 혹시 또 그러셨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중국에 보내는 사인을 발표하셨으면 사전에 우리 여야 위원들에게 말씀하시기 힘들었으면 사후에라도 저희들에게, 적어도 그 이튿날 아침이나 말씀해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답변들, 특히 우리가 발언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장관님의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때로는 장관께서 핵심을 벗어난 모호한 답변들이

늘 주를 이뤘는데 그 3불 입장에 관해서는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비외교적일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발표의 장에 여야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는 들러리가 돼 버렸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생길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 이쪽에 아직 경험이 적으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의미를 부여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그다음 날 아침에라도 일찍 여야 위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어제 장관의 답변을 신문 보고 해석하지 않도록 장관께서는 소통해 주셨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런 것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라고 했어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지 장관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중국에 메시지 보낼 생각이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 생기면 장관, 직접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다. 청와대의 권력의 유혹이 늘 그겁니다. 이런 공식 라인보다 권력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막판에 외교부를 끼게 합니다. 들러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께서 ‘노’ 하시면 정말 장관은 당당한 입장 가질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요새 위안부 협상 잘못됐다고 TF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외교부가 맡아서 하던 일을 결국은 청와대 나서고 국정원이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례들을 청와대가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공식 채널에 대한 유혹, 상대는 우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어느 외교관이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우위를 점하는 그런 내재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면 주도권을 상실한다.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3불 입장에 관한 것은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정을 제가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려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할 수 있고 장관이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3불 입장에 관해서는 오히려 발표 전보다 더 많은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섭섭함 또 여야 위원들이 그런 중요한 메시지에 들러리 선 불쾌함, 이런 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연설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정부나 여야가 따로 없다. 한반도 정책에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들러리로 만드시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해 온 답변이고 우리 변함이 없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앉은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말 그것은 모양은 안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표 청와대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많이 소외되고 그러는데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일 하시면 되지요. 문제는 장관님께서 이것은 내 일이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같이 맞대고 일한 장관님들이 소외되거나 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께서 좀 더 힘 있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한 준비된 메시지,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를 통해서 하는 것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사전에 혹은 사후에 여야 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 또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식의 외교 메시지를 발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의 그런 소회 충분이 마음에 담겠습니다. 경과야 어쨌든 여야 위원님들에 대한 소통의 노력이 저희가 좀 부족한 것은 늘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랬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 깊게 새겨두고 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외교부의 입장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나 안보실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분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안보실에서 주관을 한 것이고 외교부는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를 통해서 보고도 받고 저희 의견도 계속 개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우리하고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 대 외교부 또는 안보실 대 안보실 이렇게 딱 맞는 상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정양석 위원 장관님, 말 끊어 죄송한데요, 이것은 외교부가 발표는 했지만 내용은 군사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목소리 내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좋다고. 당연히 다양하게 말씀하셔야지 왜 한목소리를 냅니까?

역할 분담이 아니라…… 그러시지요. 역할 분담하시되 역할을 뺐긴 것을 분담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중국과의 사드 배치를 둔 갈등 문제는 우리 외교가 당면한 큰 현안의 하나였습니다.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또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원활한 한중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31일 협의 내용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노력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자꾸 3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또 오늘 제가 듣기로는 장관께서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계시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명확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히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 온 그런 세 부분의 정부 정책 방향이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더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과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큰 틀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다시 한번 동북아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익에 오히려 보완적 입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확고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민 방한으로서 한결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5년간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자 관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질서를 관리하는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지난 10월 31일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 시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나름의 독자 제재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를 보면서 우리가 독자 제재안이라고 할 때 무엇을 독자 제재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독자 제재안이라는 게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엔이 ‘우리 국제사회가 이러 이렇게 제재를 합시다’라고 합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나라 입장에서 추가로 뭔가 제재를 가하게 될 때 그것이 독자 제재가 아닌가. 아무 나라도 하지 않은 그런 제재안을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태게 될 때 그것만이 독자 제재안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자 제재라고 할 때 장관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독자 제재를 이해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독자라고 하면 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협의나 합의 없이 그냥 정부의 입장에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사실 독자 제재를 물었을 때는 그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떠한 조치를 독자 제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18명의 북한 사람들에 대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18명은 우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8명의 제재를 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장관님, 저는 독자 제재라고 할 때는 유엔이, 국제사회가 합의해서 결정한 그 제재 이외의 제재를 가할 때 그게 독자 제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나라에서도 하지 않은 그런 유례없는 새로운 어떤 제재안을 만들 때만 그것이 독자 제재안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저는 중남미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공외교·국민 외교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가 바로 그 분야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외교부에서 공공외교·국민 외교 활성화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상으로 1차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오늘 예산안 상정과 이에 따른 대체토론인데 실제 토론의 요점은 전혀 엉뚱하게도 이번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질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한중 관계 이렇게 어려워졌고 갈등 증폭돼서 우리 수출기업들,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재중국 우리 교민들 얘기 들어 봤더니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이후에 중국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우리 교민들이 한국말로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중국 국정감사 갔더니.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 복원시키기로 이렇게 발표한 것은 우리 외교의 대단히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오래된 입장이었지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미 MD 체계 편입과도 무관하고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다 지켜 왔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방침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그래서……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은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지만 관련국,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번 한중 외교관계의 대단히 큰 성과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굴욕외교다’, ‘이면합의가 있느냐’, 심지어는 ‘항복문서다’ 이런 표현까지 오늘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도 대환영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환영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경협 위원** 이번의 우리 한중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이 발표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또 일본은 외무대신 기자회견 시 평가를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환영하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중국에 진출 내지는 중국에 있는 교민들, 우리 전체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한중 관계가 갈등 관계를 벗어나서 다시 복원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지금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의 일부 야당들만 대단히 못마땅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 문제의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고 이런 것들이 진짜냐 아니냐, 이면합의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오늘 계속 지적



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 사고 쳐 놓은 한중 관계를 그동안 지난 정부하에서는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도 못 하고, 제대로 된 협상한 번도 못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에 대한 시기이고 질투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어려워졌던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이 입장의 차이가 있었지만, 당연히 국가간에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추진하고 중국은 반대하고 뭐 있을 수 있지요.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한중 간 신뢰를 깨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서 천안문 망루에서 참관하고, 이것이 한중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줬던, 이런 관계로 갔던 한중 관계가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갑자기 찬반의 차이가 아니라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반발이 커졌습니다. 그 반발이 커진 데에는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황교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사드 배치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가 일주일 만에 이것을 번복해서 갑자기 배치 결정을 하고, 한민구 장관이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3일 전에 배치 검토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가 3일 만에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밑줄에서 추진되면서 국민적 오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고, 결국 이렇게 했던 졸속적인 추진 방식이 중국의 표현에 의하면 ‘뒤통수 맞았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배신감을 토로하고 이것이 한중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중국이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이번 사드 배치가 MD 체계에 편입될지 모른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오해인지 곡해인지 하여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기본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본 입장에 있어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협의 결론에도 나타나 있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중국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우리 배치 과정의 졸속적인 문제입니다. 미리 설명을 하고 우리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 속이듯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 결정한 바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전격적으로 발표해 버리면서 나타난, 그래서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쪽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한중 관계를 복원, 정상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설명하고 당당하게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안보 주권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 측이 취했던 어떤 근거 없는 트집이나 보복 조치나 이런 것은 결코 묵과되고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 외교부가 자꾸 여기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로 이렇게 전략되는 한 제대로 된 외교나 협상이 있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장관께서는 잘 유념해 주셨

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중국 측에 3불 입장을 표명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기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겠는가, 또 실효성도 없는 독자 대북제재를 부랴부랴 발표한 것도 결국은 3불 입장 표명에 따른 미국 심기 관리용 아닌가 하는 이런 항간의 지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또 보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는 유네스코 대표부를 통해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NGO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태규 위원**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공동 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는 일본의 폭력적 외교를 규탄했다. 이번 등재 과정에서 일본은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주장하고 관계 규정 개정을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분담금을 내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치열한 물밑 외교전을 펼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는 대표부를 통해서 유네스코 사무국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시 소위원들 그리고 IAC, 자문위원회 심사 시 위원들에 대해서 이 사안이 객관적이고 당당하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등재가 보류된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외교가 우리 외교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과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기……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대로 결론이 난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직 뭐 완전히 문제가 끝났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뒤집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차기 사무총장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장관님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옛날에 인터뷰하실 적에도 ‘국제기구에 진출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봤고, 또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지명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풀어내시는 것이 장관님의 어떤 새로운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실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장관께 좀 여쭙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어떤 뚜렷한 징후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태규 위원** 그렇게 징후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저희 관계기관 간에 수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진 판단을 근거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내려진 판단이……

**○이태규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정보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관련 기관, 정보기관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개성공단이 명확하게 재가동되고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영상자료도 확인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휴민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가동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판단 근거는 관계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관계기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보위에서의 관계기관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 정보위에서 보고한 부처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지난 10월 달에도 저희가 최근에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진 판단은 그럴 징후가 있다고 충분히 보이나 구체적으로 북한이 재가동하고 있다고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그때 내려진 관계기관의 회의 결과입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자료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 이런 쪽에 차량이 있다가 차량이 한 대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른 회사에도 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제가 영상자료를 구해서……

군이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이 아마 NSC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북 정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데 그쪽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주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태규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건 없지만 사실관계만큼은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외교부에 독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는 안 갖고 오고 기념품을 사무실로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본, 볼펜, 가방, 가죽 노트패드 이런 것을 들고 왔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배포했느냐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엔 3억 6000만 원어치 제작했고 내년에도 3억 6000만 원 제작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독도가 홍보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리고 가죽 패드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디에도 독도라는 말이 찍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열어 봤어요. 그랬더니 맨 뒤에 노트 뒤쪽에 살짝 갖다 놓아 가지고 독도란 것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쥐 가지고 독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에 이거 돌립니까? 국내에 돌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독도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딱 30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 통일미래기획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재도 보안이고 나중에 이수자들이 쓴 논문도 보안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수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수를 받습니다, 외국도 한 3달씩 나갔다 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수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자산으로 커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미래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각 부처가 통일과 관련된, 남북관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통일 경험이라든가 또는 체제의 전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 나가서 약 3개월 정도 직접 현장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각 부처에 돌아가게 되면 말씀드린 그런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현장에서 좀 더 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방법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일부장관 조명균 각 부처에서 그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관님이 독도는 모르시면 주무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다 주었는지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정양석 위원 뭐 하나 들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태규 위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줘서 독도를 홍보하고 다니는지……

○위원장 심재권 직책과 성함을 이야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유기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도에 관한 홍보 관련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상세한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도에 관한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은……

○이태규 위원 심의관님, 제작한 것을 누구한테 배포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독도 홍보를 위해서 배포한 거니까. 독도 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거잖아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 유기준 예.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를 위한 배포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포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 유기준 재외공관 같은 데서 보면 주요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당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비싼 홍보물품을 주고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폴더 같은 것을 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교민 대상으로, 한글학교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럴 때는 간단간단한 홍보 자료를 줘서 독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5년 지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 찾아서 자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의 고용률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이런 조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대 61, 실업률 같은 경우도 5 대 3.5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좀 나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을 추측해 보면 차상위계층이 169명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보 관리 대상이 아니라 ‘먼저 온 통일’ 이렇게 지난 박근혜 정부는 표현했는데 우리 국민으로 되는 과정에서 자립을 하려면 스스로 일자리를 잡아서 소득을 높여서 자립하는 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 고용률이나 실업률이나 월 평균 임금이나 평균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꽤 많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제도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등록되면 무려 54건에 관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 상태에서는 60건쯤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서 살기 어려워서 북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지서비스 자체만 제대로 전달이 되어도 재이탈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접근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통일부에서 이 필요성이 있으면 적정 사업비 규모를 산정해서 다음 소위 때까지, 이것이 예결소위로 넘어갈 때까지 산출해 오셔서 최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행자부나 복지부 이런 쪽으로 완전히 업무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담당하게 하는, 그래서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실태조사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북한이탈주민들

을 파악해서 반영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든 그것은 다음 예결소위 있을 때까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보고하시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감합니다.

○**이인영 위원** 차상위계층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3억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연구용역 실시한 게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도 5억 9000인가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라서 그런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도 활용하고요. 그것도 활용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평화공원하고 그 범위나 지역 대상 같은 것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성격도 다르고 또 때로는 보완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거지 지난번 것이 너무 부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억쯤 반영되어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문가 정책연구용역 중에 대국민 인식 조사 모델 개발과 인식 조사 실시 이것이 1억이나 돼요. 이것 비용이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에 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임차료를 내고 사업 추진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너무 적어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사업 추진비는 200만 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국민협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모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추진기구를 결성할 필요성이 있게 되면 추진기구에 맞춰서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기구·조직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그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련된 것은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예산만 현재……

○**이인영 위원** 준비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나중에 예비비 같은 것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외교부장관님한테 돌아와서요.

지난번에 확인감사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스텔라 데이치호와 관련해서 끝까지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인영 위원** 그 사업비 관련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해수부장관님과 일차적으로 협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좀 더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해수부와 같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소위 때까지 적정사업비 규모를 산정해서 보고해 주셔야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 세계시민센터 설립 관련 해서 조직 구성은 어떤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국제이사가 열세 분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1차 이사회를 8월 달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법인으로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오지리 정부 산하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지금 3개국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기구로 등록을 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윤영석 위원** 국제기구로. 그러면 지난 8월 4일이던가요, 그때 설립이 이미 된 게 아니고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제기구로서는 아직은 아니고요, 센터 자체는 설립이, 이미 오지리 정부 하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현재 이사회도 구성이 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그 1차 이사회 때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큰 화두로 활동을 한다’ 하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센터의 활동 내용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도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개발원조의 하나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유엔에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중요시 해 온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정이었고, 또 이것이 반기문 총장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출한 사무총장, 그리고 10년간의 역량과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 이분의 이름이 걸린 센터

라고 하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런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지원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단체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검토 끝에 지원을 합니다만 이것이 SDGs 교육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센터라고 했을 때는 반기문 총장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지리 정부의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다거나 건의가 있었다면 한번 충분히 검토했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이 단체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어떤 관련성을 특별히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비판도 많고 본 위원도 사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한다거나 내용을 충실히 채우지 못하고 예산에 올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책정 단계이고 막상 집행 단계에서는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이 센터하고 MOU를 맺은 뒤에 예산이 배정될 것이고 지출이 될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예산 절차보다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이러한 단체에 우리 국민 혈세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상당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리한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외교부장관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외교센터,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국민외교센터는 조직 구성을 어느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책정된 예산으로서는 12명의 인력 확보하고요, 또 국민 외교 플랫폼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그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영석 위원** 행정기관인가요, 아니면 법인인

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허락하시면 담당 국장께 한번……

○윤영석 위원 예,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과 성명을……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외교부 정책기획관 마상윤입니다.

말씀하신 국민외교센터는 민간위탁기구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12명. 이 예산 14억 원이 거의 다 인건비와 또 조직 기관운영비이지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산 중 인건비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3억 8000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전체 예산은 15억이고요, 그중에 인건비는 3억 8000입니다.

○윤영석 위원 12명의 인건비로?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그렇습니다. 1인당 월 350만 원가량이 배정되는 셈입니다.

○윤영석 위원 1인당 월 350만 원이……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12명이요?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12명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2개월로 하면?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총 3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3억 8000?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현재 제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구비가 돼 있는데 갑자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러한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요?

또 센터라는 게 설립이 한번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물론 공약사항이니까 저희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원래의……

○윤영석 위원 공약사항의 그 취지를 꼭 센터 설립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외교부정책기획관 마상윤 위원님, 그냥 외교부의 기존 기구를 가지고 소통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직원들 하나하나가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센터를 저희가 설립해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부내의 그러한 조직들이, 부처들이 대내외적으로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게끔 축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통일부장관님, 아까 태영호 공사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하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공사의 증언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번 증언을 그렇게 가볍게 들어서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위 평화공세를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 미군 철수 이런 것을 소위 평화협정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기네들 간에는, 북·미 간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주장해 오던 바로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G20 정상 회의에 앞서서 베를린 구상으로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의 그런 평화공세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내용 중에 주요한 부분이 바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 추진이었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게 상당히 그런 북한의 그런 공세에 말려 들어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는 이 점을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태영호 공사 언급한 부분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이주영 위원** 지난번에 하던 얘기니까 그 정도로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을 이번에 8.7% 증액한 1조 462억을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까지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잘 할 때를 전제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불용처리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분위기와 시점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북 관계를 개선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증액까지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의문스럽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좀 답변드릴까요?

○**이주영 위원** 간단하게. 아까 얘기는 하셨어요,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증액하였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조명균** 의지의 표현이고 또 저희가 남북관계 복원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다가……

○**이주영 위원**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에 통일 분위기를 진작시

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는데 이번에는……

통일국민협의회라고 그랬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국민협약.

○**이주영 위원** 협약. 그렇게 새 정부의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 중에 전 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없애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통일박람회를 금년까지 세 차례 해 오셨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박람회는 두 차례 하고 올해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주영 위원** 됐는데, 이런 것 지금 예산 보니까 싹둑 다 잘라 버렸어요. 4억 9000만 원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계승·발전시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서 반영하고 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살려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박람회는 원래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한 해만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 해에 이것이 한 차례 더 개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내용 중에……

○**이주영 위원** 올해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다가 조금 방향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사업과 많은 방향에서 달라졌고……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너무 싹둑싹둑 잘라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취지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 내용 중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다음 외교부장관한테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지금 고유명사화가 되어 가지고 유엔을 비롯해서 SDG의 한 부분 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SDG의 한……

○**이주영 위원** 그 무대에서 활약을 오래 해 오



셨으니,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새마을 운동 부분 그것도 한 챕터로 해 가지고 유엔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SDG의 한 부분에 다 포함돼 있어요. 빈곤에 시달린 저개발국가의 모범 사례라고 해 가지고 UNDP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UNDP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이해가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SDG의 어떤 틀에 명시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끝났으니,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지금 각국의 특파원들이 많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도쿄를 가지 않고 서울로 오느냐 했더니 방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주목할 만한 큰 발언을 일본에 가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국회에 와서 트럼프의 그 연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고 취재를 하고 실제 방한하면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지 않고 한국에 와 있고, 실제 BBC 같은 경우에는 주일 특파원이 지금 일본을 커버하지 않고 서울에 와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제가 몇 사람들 인터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들 얘기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예측 좀 해 보라. 그동안에 트위터에 올리거나…… 여러 발언들을 계속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북 강경 발언 또 군사적 옵션 문제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어떤 화해적 제스처로 대북 대화를 언급할 것인지 그걸 좀 예측해 보라 그런 질문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 왔을 테고, 모르겠습니다, 국회 연설문의 초안도, 드래프트(draft)도 지금 우리가 받아 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상회담 의제 조율은 잘 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

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공동성명은 지난 6월 정상회담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다른 공동성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지금 협의하고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발언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특파원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으로 봐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잘 조율하고 있겠지요, 한미 간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만족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돌출 발언은 예상되지 않은 것이겠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썽, 돌출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건데……

○**이수혁 위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강경한 ‘대북 군사적 옵션 배제하지 않는다,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워집니까, 그런 발언해도 괜찮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쨌든 국회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내외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북핵 문제라는 어떤 해결의 의지를 갖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국회, 한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북핵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히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은 결국은 외교적인 해결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수혁 위원** 그게 지금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막상 연설을 하는 현장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수혁 위원** 그렇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님의 연설이니까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대북 대화를 아주 전격적으로 제안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제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이수혁 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측도 말씀드리기 좀……

○**이수혁 위원** 저는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대북 대화 제의를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건 뭐 꼭 예측이라기보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예측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단순히 그냥 점쟁이 식의 예측이 아니고, 물론 점쟁이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런 류의 것은 아니고 상황과 구도가 대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채택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50일 넘게 북한이 더 이상의 행동을,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좋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싶고 또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방한 전에 미국에 주려고 북한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모르지요, 또 영똥한 짓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런 표현이 이번 국회 연설에서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측을 좀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한번 해 보시지요. 대화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것인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도 위원님과 같은 기대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직도 조금 성은 안 차지만 외교부장관으로서 어려운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툼 맥아더 공화당 하원의원이 10월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맥아더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홍문종 위원** 없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홍문종 위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 해 가지고 취업비자 갱신 강화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H-1B 비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홍문종 위원** 그래서 2013년 이후 회기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쿼터 수 1만 5000개를 한국과 파트너쉽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안타깝게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홍문종 위원** 별로 없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 문제는 주미대사관에서 계속 의원들을 접촉해서 저희의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비자 발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올해는 8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직 채용 비자 문제는 FTA 개정 협상하고 적극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도 충분히 요구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협의가 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 적극 감안하

했습니다. 그래서 FTA 협상 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통상 교섭의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전문인력은 외교부에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까라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또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주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 40명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스페셜 엑스퍼트(special expert)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외교부에 모셔 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예산을 좀 책정하시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닫히게 됐느냐, 남북관계에 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와 전 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여간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꼭 주석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때는 잘못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중요하다는데는 그래도 혹시 그것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국제적인 압력이나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들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의혹 이런 것들 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석을 남겨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아까 이주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홍문종 위원** 그런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전 정부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단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야말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일부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현지조사나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사장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동감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DMZ와 경기북부가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버퍼 존(buffer zone)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통일 사업에 앞으로 북쪽이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통일부에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알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 내일 정상회담 준비에 바쁘실 테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위 3불 약속, 그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기회가 되실 때 앞날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뭔가 가능성 부분을 열어 둘 수 있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지금 새마을운동 관련 ODA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축소라기보다도 새마을운동 브랜드가 너무 기준 없이 남용이 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2017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체…… 외교부 예산 말씀이십니까?

○**윤영석 위원** KOICA, 그게 KOICA 사업이지요?

○**위원장 심재권** 직책과 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KOICA 경영기획이사 김인입니다.

2017년 예산은 354억 원이었고요.

○**윤영석 위원** 새마을운동 관련이?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윤영석 위원** 2018년도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207억 원 편성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그러니까 대폭 축소하는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대폭 축소한 건 아니고요, 분류를 달리했습니다. KOICA에 총 26개 사업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6개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은 제외하고 20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새마을 사업으로 남겨 두고 10개 사업은 농촌개발 사업으로 과목을 분류해서 했습니다.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건 예결소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청년봉사단도 KOICA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청년봉사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북도 새마을봉사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KOICA가 자체적으로 만든 글로벌 새마을봉사단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사단의 경우에는 경상북도가 사업비를 지출하고요, KOICA에서는 체재비를 좀 지원해서 경상북도 새마을사업은 2017년 31명에서 2018년 31명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KOICA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새마을봉사단 35명은 2018년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 봉사단원에서 농촌·농업 분야 봉사단으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윤영석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윤영석 위원** 계속 시행을 하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예, 일부 과도하게 많이 반영됐던 내용들을 추려서요.

왜냐하면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KOICA에서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3~4년 동안 했던 사업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소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예산소위 심의에 대비해서 남북 협력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증액한 835억 원은 삭감 주장이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교부 상대로 질의했던 새마을 예산 부분인데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성이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빈곤 극복 경험 이런 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 색채 지우기에 나서는 그런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KOICA 예산 질의가 좀 있었는데 외교부 예산에 보면 국제기구협력사업, WFP하고 새마을 제로형거 커뮤니티 설립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700만 불, 수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내년도 부분에 한 푼도 책정이 안 됐어요.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안 한 겁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은……

○**이주영 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국제기구 협력 국장이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거기서 좀 답변을 하시지요, 장관께서 일일이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위원장 심재권**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저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으로 있는 오현주입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WFP 새마을 제로형거 커뮤니티 설립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게 2018년까지 2700만 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일단 국제기구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원하는 만큼 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WFP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부분으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끌고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당초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금년도에 르완다에 300만 불, 네팔에 200만 불, 금년도는 이게 제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예,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이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 사업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한 나라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한 나라에 대해서도?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예.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르완다하고 네팔인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이 이 앞에 제로형거 커뮤니티라는 게 WFP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니까 새마을이 들어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없앤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그렇지만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는 힘들고……

○**이주영 위원** 중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소위에서 다시 이 국제기구들과 약속한 부분들을 살려 갈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까지 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심재권 위원, 김경협 위원, 문희상 위원, 원유철 위원, 강창일 위원, 원혜영 위원, 이석현 위원, 정양석 위원, 이인영 위원, 홍문종 위원, 유기준 위원, 박주선 위원, 이태규 위원, 이주영 위원, 윤영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의 PKO 파견연장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장관, 조명균 장관,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창일	김경협	문희상	박병석
박주선	심재권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수혁	이인영	이주영	이태규
정양석	홍문종		

○청가 위원(2인)

최경환(한)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도훈		
대변인	노규덕		
기획조정실장	서정인		
국제안보대사	문덕호		
조정기획관	정운진		
외교정보관리관	김동영		

정책기획관	마상윤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함상욱
아프리카중동국장	박용민
문화외교국장	이은용
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양자경제외교국장	윤성덕
북핵외교기획단장	이상화
평화외교기획단장	김용현
국제법률국심의관	유기준
개발협력국심의관	오현주
국립외교원교수부장	여운기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
기획협력이사	김광근
교류협력이사	윤금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한국국제협력단경영기획이사	김인
통일부	
장관	조명균
기획조정실장	서호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정세분석국장	정승훈
교류협력국장	이주태
인도협력국장	김병대
남북협력지구장	이강우
남발전기획단장	김의도
남북회담본부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고경빈
사무총장	박중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임병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오대석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	서정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용규
직무대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황인성
기획조정관	김안나
통일정책자문국장	김점준
위원활동지원국장	전난경

【보고사항】

○의안 회부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  
(2017. 9. 26. 정부 제출)  
9월 27일 회부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하태경·김동철·김현아·박인숙·신보라·유승민·이종배·정병국·주호영·홍일표 의원 발의)

9월 29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2017. 10. 12. 정양석·주호영·김현아·김세연·이종구·송희경·김무성·김용태·하태경·오신환·윤상현·지상욱·김영우·신상진·정병국 의원 발의)

10월 13일 회부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2017. 10. 18. 정부 제출)

10월 19일 회부됨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7. 10.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30일 회부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 심재권·이수혁·신창현·소병훈·이철희·원혜영·김경협·유성엽·이석현·설훈·박병석·유기준·정양석·홍문종·문희상 의원 발의)

11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7. 9. 25. 김규환·소병훈·인재근·최인호·이현승·이장우·조훈현·김도읍·김기선·이채익·유동수·송기현·박재호·어기구·권철승·김수민·조배숙·정운천·홍익표·김병관 의원 발의)

9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